송영길, 검찰 '돈봉투' 수사팀 공수처 고발…"이정근 녹취 유출"

법원에는 탄원서…"피의사실 공표" 주장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인민 재판 행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탄원서에서 "JTBC는 검찰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탄원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탄원인(송 전 대표)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원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최이슬 기자

서울 노점상 단체, 노점 말살조례 저지 기자회견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상단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 노점말살 조례 제정 저지와 함께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랑해, 보고 싶어" 10대 아동 성착취물 6천여개 만든 25명 검거

SNS 대화로 친밀감 형성해 성착취물 제작 유도

10대 아동에게 SNS 등으로 접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최모(17)씨 등 25명을 검거했다.

이어 최씨 등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해 6명을 구속상태로,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아동 A(12)양에게 SNS를 이용해 접근, 반복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전송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A양에게 '사랑해, 보고싶어'라고 말하며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아동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의 경우 직접 만나자며 A양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10대에서 30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딸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상을 요구받는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A양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을 받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A양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아울러 또 다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435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아동·청소년 45명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범행 혐의를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6145개를 폐기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며 "또한 추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 역시 자녀 SNS 사용을 살피고, 관련 사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슬비 기자

"미성년자와 신체접촉" 협박해 2억 뜯은 7명 구속기소

오픈 채팅방 개설한 뒤 성인남성 '술 마시자' 유인해 범행

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유도하고 합의금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들과 술자리를 갖게 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이들은 유인책, 술자리에서 분위기 등을 잡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 등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책이 '술을 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남성들을 불러내면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남성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이후 공범인 여성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 등을 유도하면 보호자를 빙자한 또 다른 피의자가 나타나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술좌석 합류 공범이 무릎 꿇고 합의해달라고 바람을 잡아 5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 1명에게 술자리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경찰은 다른 미성년자 공범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선옥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